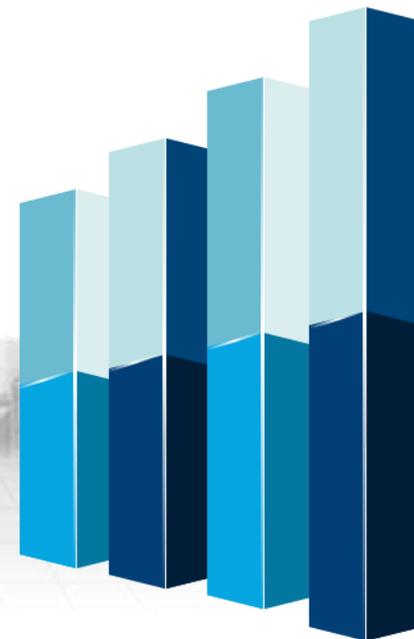


2015 「유권자 지형분석 결과」

2015. 09. 01.



01 조사 개요



I 조사 설계



본 조사는

1. 우리사회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meta agenda) 파악,
2.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 지향점 및 리더십 방향 설정을 위해 기획됨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행정 구역	남성					여성					합계
조사규모	1,000명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서울	19	20	21	19	20	19	20	21	20	24	203
표본설계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	부산	6	6	7	7	8	6	6	7	8	10	71
조사방법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개별 면접 조사	대구	5	4	5	5	5	4	4	5	5	6	48
조사기간	2015년 6월 22일 ~ 2015년 7월 19일	인천	6	6	6	6	5	5	5	6	6	6	57
조사진행	(주)리서치앤리서치	광주	3	3	3	3	2	3	3	3	3	3	29
		대전	3	3	3	3	3	3	3	3	3	3	30
		울산	2	2	3	2	2	2	2	3	2	2	22
		경기	22	24	28	24	20	21	23	27	22	24	235
		강원	3	2	3	3	4	2	2	3	3	5	30
		충북	3	3	3	3	3	2	3	3	3	4	30
		충남	3	4	4	4	5	3	3	4	4	6	40
		전북	3	3	4	4	4	3	3	3	3	6	36
		전남	3	3	4	4	5	3	3	3	3	7	38
		경북	5	4	5	6	7	4	4	5	5	9	54
		경남	6	6	7	7	7	5	6	7	6	9	66
		제주	1	1	1	1	1	1	1	1	1	2	11
		합계	93	94	107	101	101	86	91	104	97	126	1,000

02 주요 조사결과 및 시사점



I 유권자 민생현안

4poor life, 여유가 없는 삶

(job/house/edu/silver p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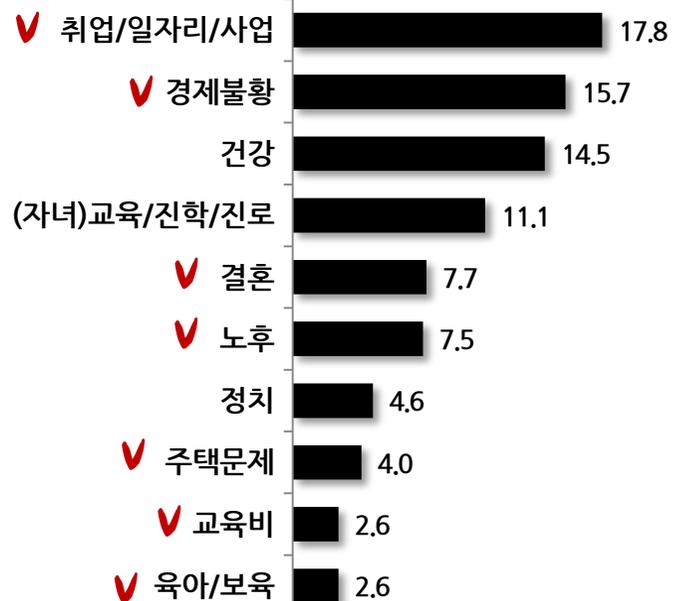
불확실/불안정의 시대

청년도 노년도 앞날에 대한 불안

모두가 '일'을 원하는 나라

노후 대비가 안된 사회,
정부를 못 믿는 국민

대화주제/관심이슈(top10)



세대별 삶에 대한 만족/불만족 이유

- ☞ 삶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는 "가족"
: 내 가족의 건강, 생활안정, 취업/승진/진학, 사업안정, 편안한 노후 등 "내 가족의 행복/안정" = "나의 행복"
- ☞ 삶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돈"
: 전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 호소

세대 공통	"경제적 어려움/경제적 여유 없어서"
20대	"취업난" "미래불안" "진로" "비정규직"
30대	"가계대출" "전세자금" "결혼" "낮은임금"
40대	"사업부진" "교육비" "가계대출" "건강"
50대	"노후불안" "건강" "사업부진" "퇴직불안"
60대 이상	"건강" "노후불안" "사업부진" "실업"

II 시대정신과 우리사회 핵심의제

2015년

저성장/고령화 심화 + 세월호 및 메르스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시대”
만인대 만인의 투쟁

Vision

세대간 통합/공생, 계층간 공존/공영
“공생공영(共生共榮)”의 시대로!
내 가족이 행복한 나라

산업화 -----> 민주화 -----> 선진화(ing)

1997년 IMF, 2007~2008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며
국민 관심이 '경제' 문제에 집중

구분	미시적/거시적 사건	Key word
김영삼 “문민정부”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IMF 외환위기	개혁, 안정, 발전
김대중 “국민의 정부”	IMF 극복, 카드 대란 남북정상회담	화합, 효율, 발전
노무현 “참여 정부”	대통령 탄핵소추 글로벌 금융위기	참여, 균형, 자율
이명박 “실용 정부”	촛불시위 천안함/연평도 사태	실용, 성장, 중도
박근혜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통합, 행복, 통일

추상적 개념(국민, 나라)보다
“가족” 등 직접적 접근

: 2013 한국인의 가치관 조사, 행복의 결정기준은 “가족”

실생활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 내세워야

: 현재 국민에게 와 닿는 제안은 “복지” 보다 “일자리”

: ‘저녁이 있는 삶’과 같은 구체적/체감도 높은 미래상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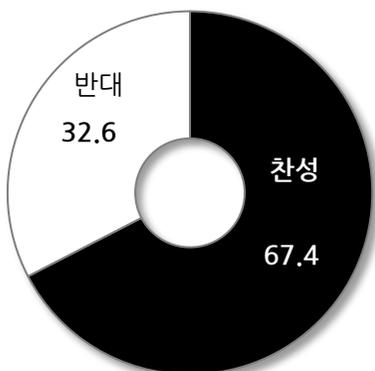
III

정책의제별 유권자 인식

유권자 최대 화두, '경제' 정책 방향은? "성장" vs "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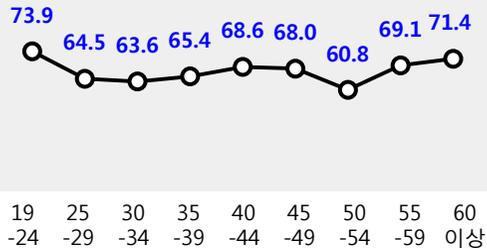
Q. '성장'과 '분배' 중 '성장'이 더 중요하다

(전체,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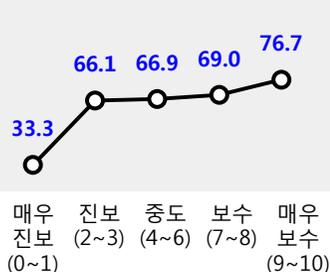


응답자특성별 "찬성(찬성+매우찬성)" 응답비율(%)

-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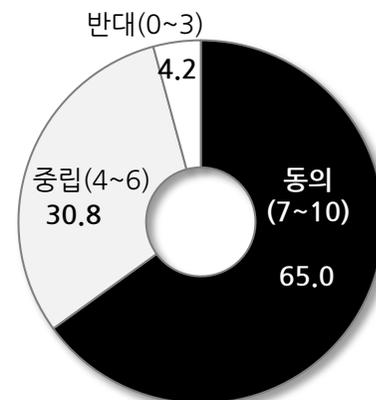


- 이념성향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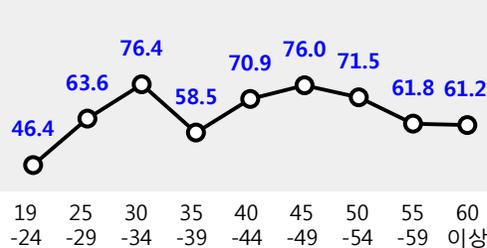
Q. 경제 정책은 '경제성장' 만큼 '소득분배'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전체,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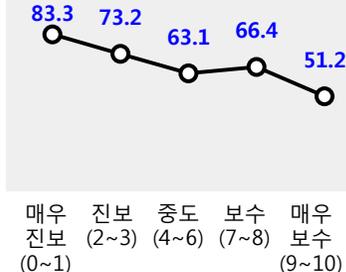


응답자특성별 "동의(7~10)" 응답비율(%)

- 연령별 -



- 이념성향별 -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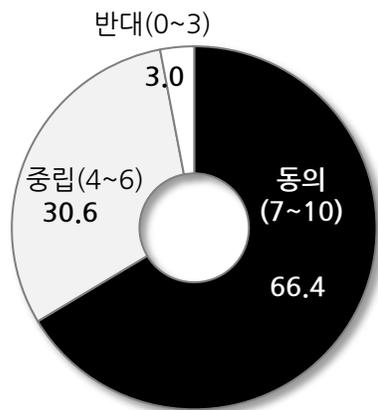
정책의제별 유권자 인식

“성장”과 “분배” 모두 중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기업지원 vs 국민소득증대]

Q.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국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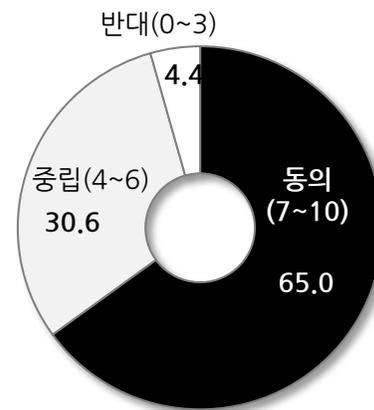


응답자특성별 “동의(7~10)” 응답비율 (%)

[최저임금 vs 중소기업/자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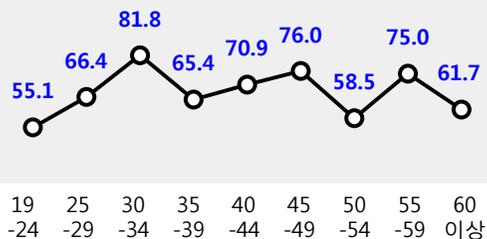
Q. 자영업과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 해도, 내수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

(전체,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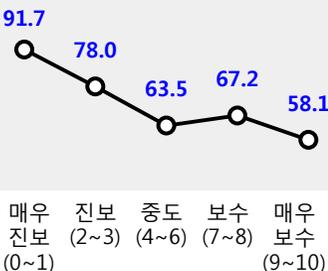


응답자특성별 “동의(7~10)” 응답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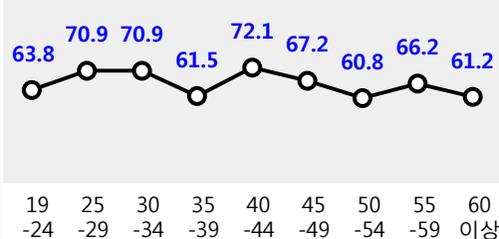
-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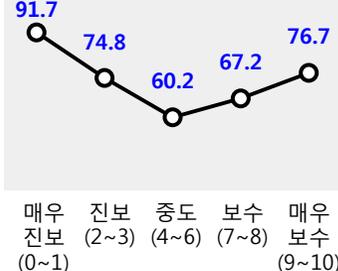
- 이념성향별 -



- 연령별 -



- 이념성향별 -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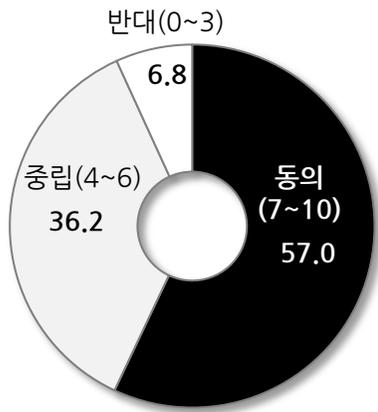
정책의제별 유권자 인식

“성장”과 “분배” 모두 중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임금피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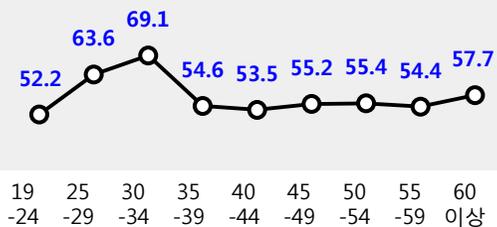
Q.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는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전체, n=1,000,%)



응답자특성별 “동의(7~10)” 응답비율(%)

-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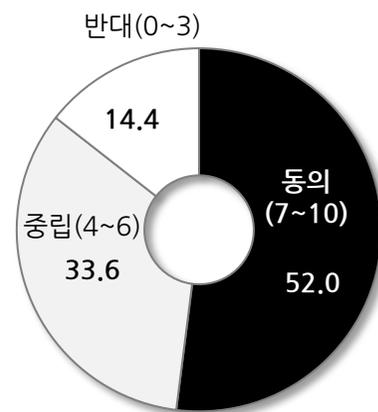
- 이념성향별 -



[비정규직 문제 해결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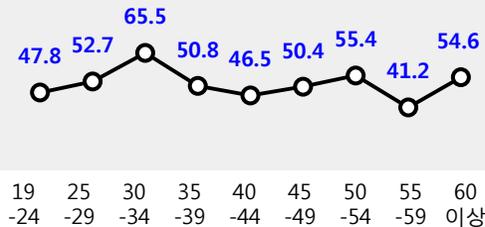
Q.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노사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전체,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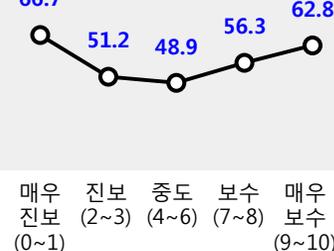


응답자특성별 “동의(7~10)” 응답비율(%)

- 연령별 -



- 이념성향별 -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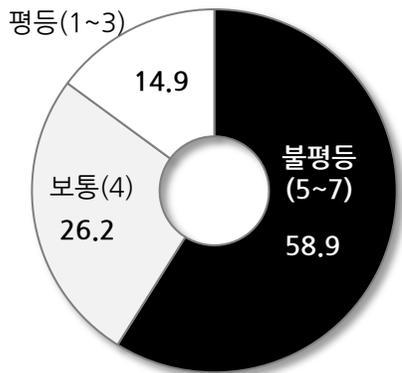
정책의제별 유권자 인식

분배 차원에서 '경제정의',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불평등수준]

Q. 우리나라는 소득이나 재산에 있어서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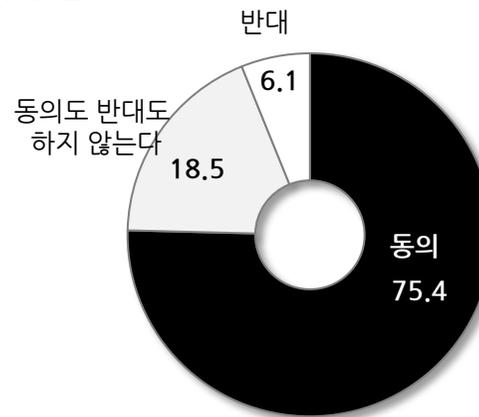


응답자특성별 “불평등(5~7)” 응답비율(%)

[정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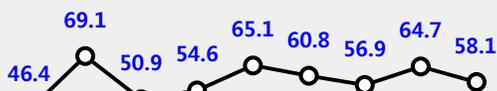
Q. 빈곤, 불평등, 차별 등의 사회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한다

(전체, n=1,000,%)



응답자특성별 “동의(7~10)” 응답비율(%)

-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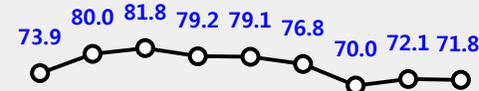
19 25 30 35 40 45 50 55 60
-24 -29 -34 -39 -44 -49 -54 -59 이상

- 이념성향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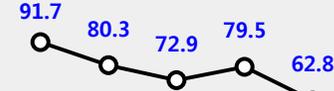
매우 진보 (0~1) 진보 (2~3) 중도 (4~6) 보수 (7~8) 매우 보수 (9~10)

- 연령별 -



19 25 30 35 40 45 50 55 60
-24 -29 -34 -39 -44 -49 -54 -59 이상

- 이념성향별 -



매우 진보 (0~1) 진보 (2~3) 중도 (4~6) 보수 (7~8) 매우 보수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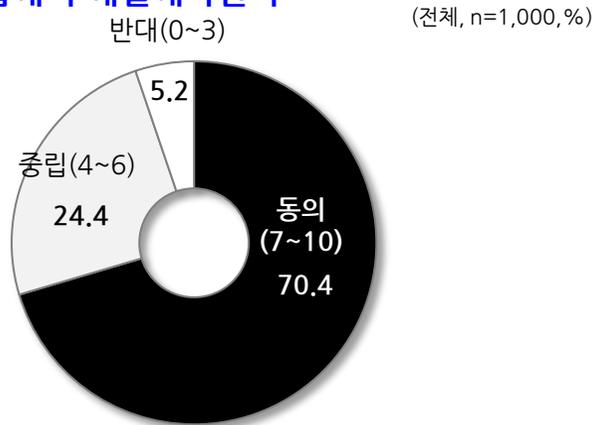
III

정책의제별 유권자 인식

분배 차원에서 '경제정의',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재벌개혁: 불공정 관행]

Q. 재벌에 의하여 흔히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한다



응답자특성별 “동의(7~10)” 응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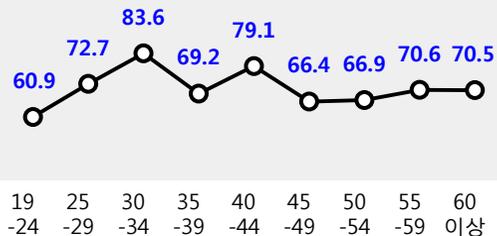
[재벌개혁: 정부주도]

Q. 재벌개혁은 기업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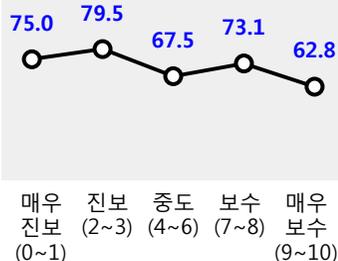


응답자특성별 “찬성(찬성+매우찬성)” 응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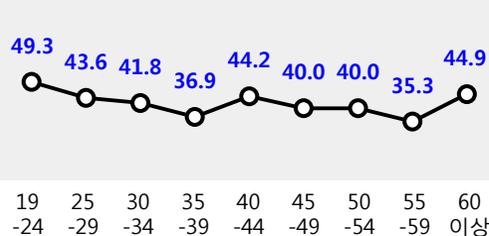
-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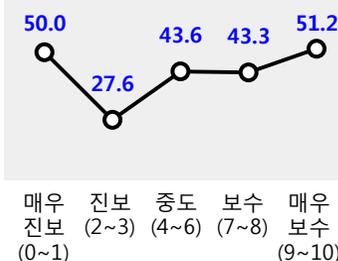
- 이념성향별 -



- 연령별 -



- 이념성향별 -



III

정책의제별 유권자 인식

분배 차원에서 '복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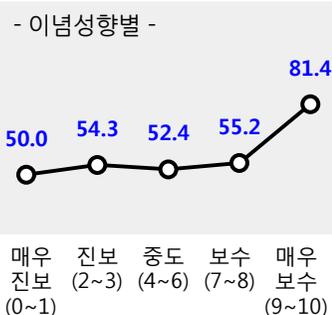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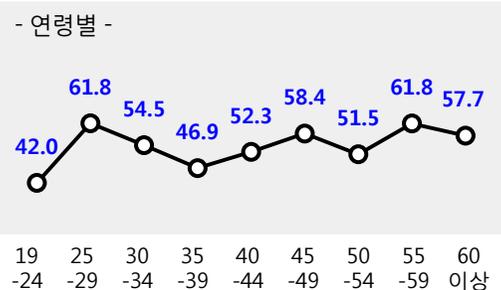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Q. 복지는 전 국민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전체,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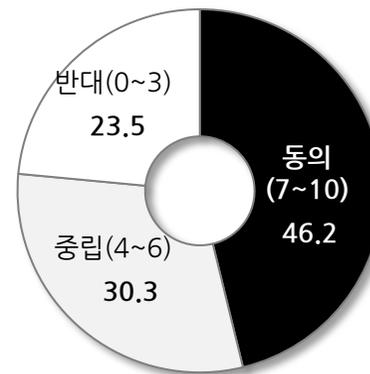
응답자특성별 "동의 (동의+매우동의)" 응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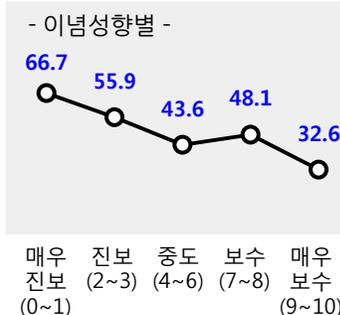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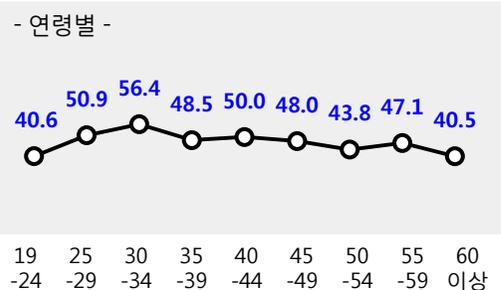
[무상급식]

Q. 학생의 생활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체, n=1,000,%)



응답자특성별 "동의(7~10)" 응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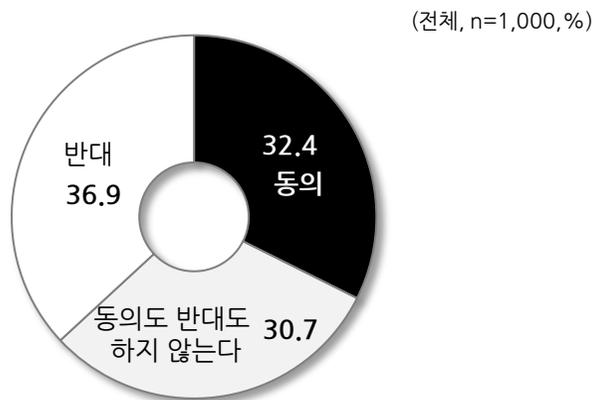
III

정책의제별 유권자 인식

분배 차원에서 '복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복지와 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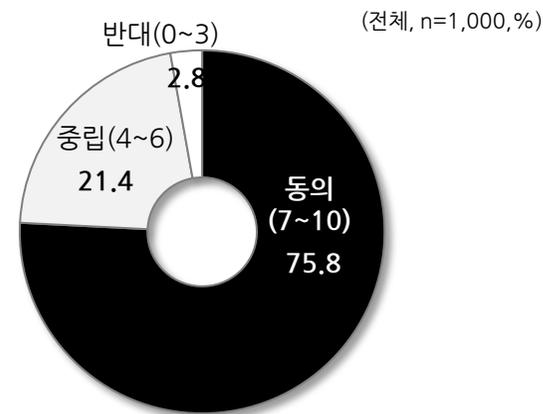
Q. 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응답자특성별 "동의 (동의+매우동의)" 응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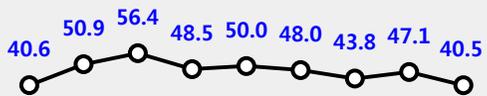
[복지와 증세:부자증세]

Q. 복지확대를 위하여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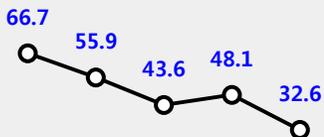
응답자특성별 "동의(7~10)" 응답비율(%)

-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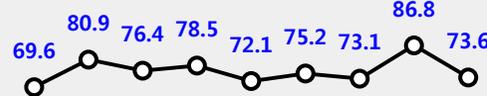
19 25 30 35 40 45 50 55 60
-24 -29 -34 -39 -44 -49 -54 -59 이상

- 이념성향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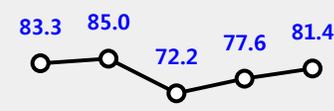
매우 진보 (0~1) 진보 (2~3) 중도 (4~6) 보수 (7~8) 매우 보수 (9~10)

- 연령별 -



19 25 30 35 40 45 50 55 60
-24 -29 -34 -39 -44 -49 -54 -59 이상

- 이념성향별 -



매우 진보 (0~1) 진보 (2~3) 중도 (4~6) 보수 (7~8) 매우 보수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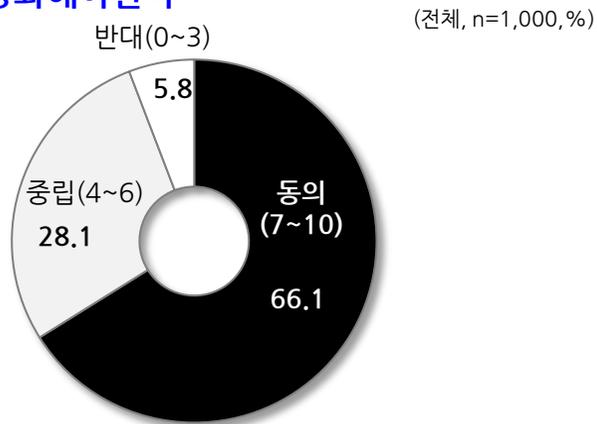
III

정책의제별 유권자 인식

분배 차원에서 '복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교육복지: 공교육 강화]

Q.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공교육을 강화해야한다



응답자특성별 "동의(7~10)" 응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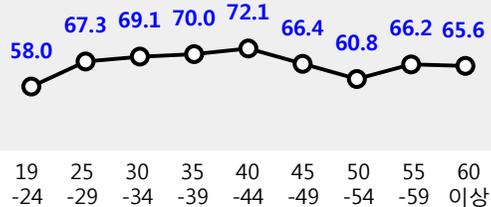
[복지와 증세:보육]

Q.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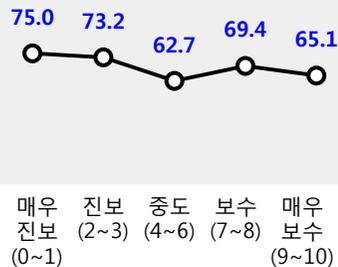


응답자특성별 "동의(동의+매우동의)" 응답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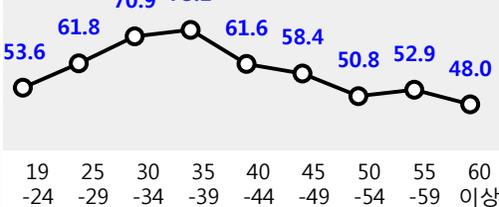
-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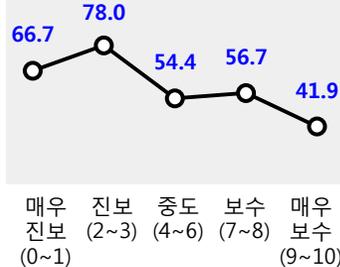
- 이념성향별 -



- 연령별 -



- 이념성향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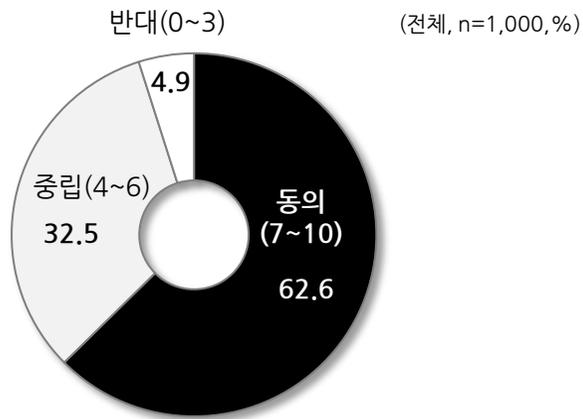
III

정책의제별 유권자 인식

국민 안전을 위한 대북 정책 방향은?

[대북정책 : 핵과 남북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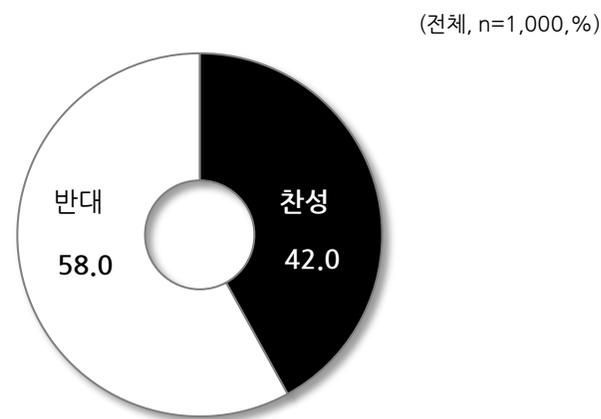
Q.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남북 협력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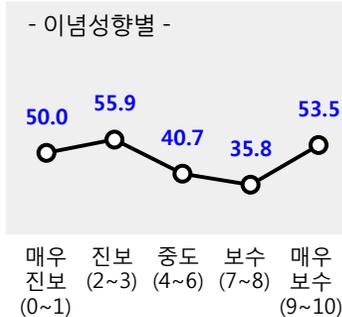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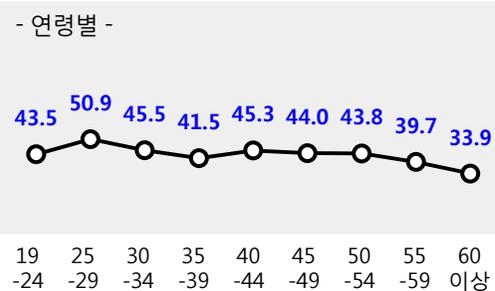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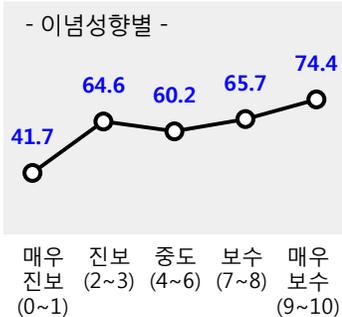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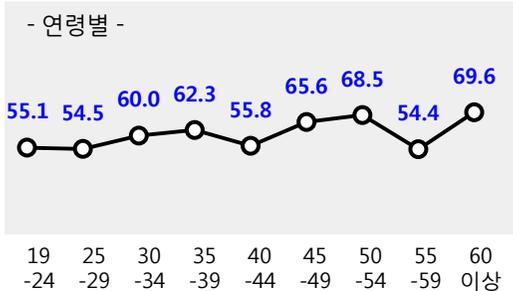
응답자특성별 “동의(7~10)” 응답비율(%)

[대북정책 : 인도적지원]

Q.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은 확대해야 한다



응답자특성별 “동의(동의+매우동의)” 응답비율(%)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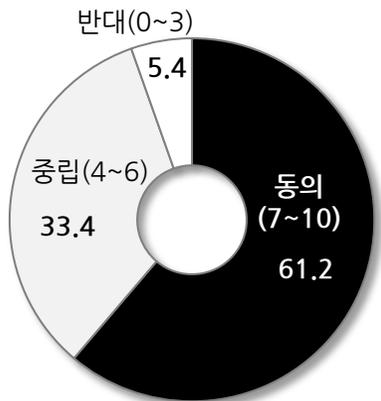
정책의제별 유권자 인식

국민 안전을 위한 대북 정책 방향은?

[대북정책 :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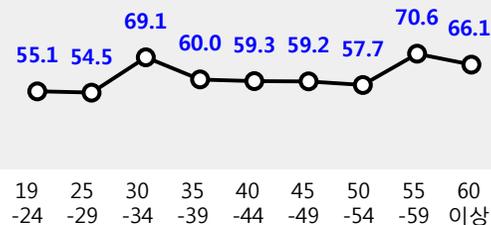
Q.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 시
즉각적으로 군사대응을 해야 한다

(전체,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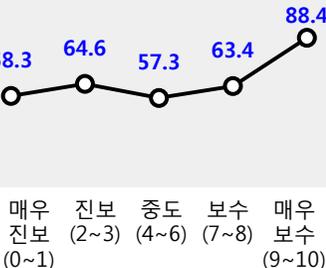


응답자특성별 “동의(7~10)” 응답비율(%)

- 연령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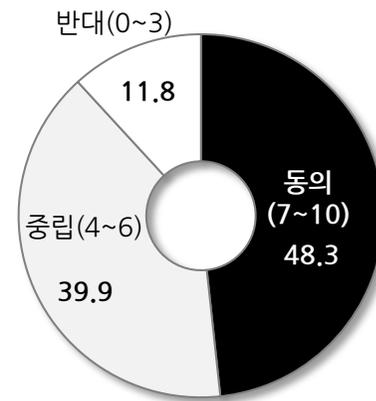
- 이념성향별 -



[대북정책 : 북한인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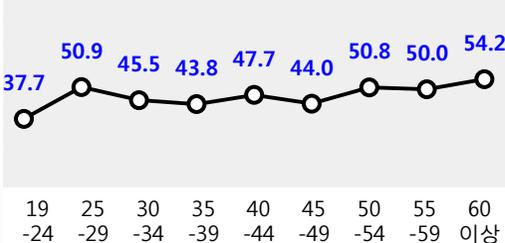
Q. 북한 동포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

(전체,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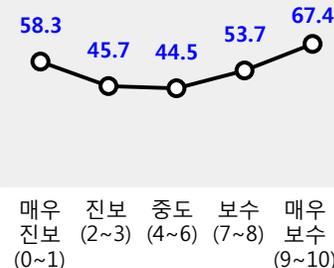


응답자특성별 “동의(7~10)” 응답비율(%)

- 연령별 -



- 이념성향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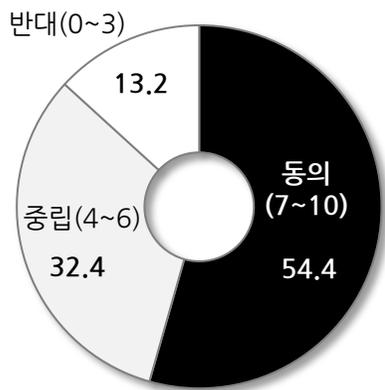
III

정책의제별 유권자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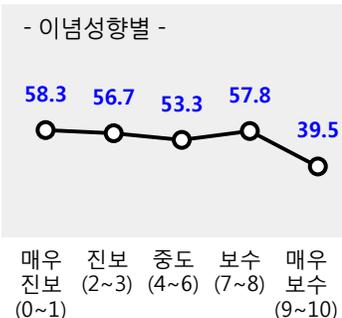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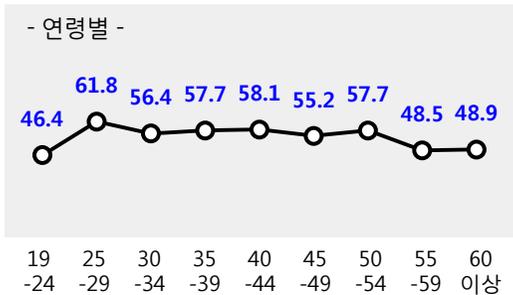
국민 안전을 위한 원전 정책 방향은?

Q.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원자력 발전은 점차 축소되어야 한다

(전체, 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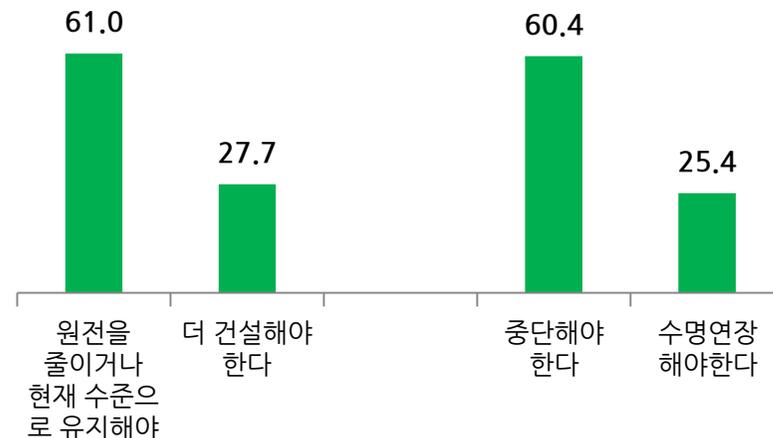
응답자특성별 “동의(7~10)” 응답비율(%)



참고. CBS 노컷뉴스(2014.07)

Q.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Q. 30년 설계수명이 지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원전에 대해서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IV 정책의제 설정 방향

유권자 최대 화두, “경제”와 “안전”

‘성장 vs 분배’ 구도 No,
‘성장’ 추구하되 ‘분배’도 놓치지 않겠다

성장과 분배, 모두 중요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분배차원에서의
‘경제정의’ 구현

분배차원에서의
‘복지’ 실현

‘안보’와 ‘안전’,
새정치민주연합이 더 잘 할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론” 지속 추진
: 실질임금 개선 + 영세기업 부담완화

일자리 복지 추구
: 새정치민주연합만의
일자리와 임금 안정 솔루션 제시

공정경제 실현
: 재벌개혁에 대한 높은 지지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정의’ 구현

교육복지의 범위/대상 명확화
: 국가 교육/보육의 의무 지지
But 대상/범위에 대한 논란

한국형 ‘합리적 복지’로
: 선별적 복지 지지 여론 높아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 복지 대안 제시

복지 증세, 부자 증세부터
: 부자 증세 높은 공감대
복지 범위/대상과 함께 재원도 논의 해야

안보이슈에 대한 국민정서 이해
: 상호주의 원칙 선호
단호함과 유연함의 조화 필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북기조’ 필요
: 북핵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
인도적지원도 원칙과 명분 필요

안전한 에너지 정책 제시
: 원전은 축소가 트렌드
추가건설, 수명연장 반대입장 유지